

통합 때 재정 지원 ‘항구성’·법적 근거 마련 최대 과제

정부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지원금’ 구체적 조달방안 확정 안 돼
정권 바뀌더라도 지원 축소·중단 없게 특별법에 기간·규모 명시해야

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구체적인 세목과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연간 5조원, 4년 지원’ 방안과 관련, 금액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통합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한 지 14일 만에 나온 정부의 화답이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서울·경기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광주시 예산 7조7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1조7000억원에 더해 연간 최대 2조원의 국비 추가 지원과 3조원 규모의 지방채수 증대 효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 광주·전남 특별시는 연간 예산 25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재정 지원의 ‘항구성’이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4년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기간이라는 점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4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는 광주·전남보다 앞서 통합을 논의해 온 타 지자체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권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세목 이양 없이 한시적인 지원책만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4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은 중장기적인 통합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해당 지원금이 단순히 권한 이양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 차원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지역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추가 포괄보조금’ 형태여야만 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마산·창원·진해(마창진) 통합 당시 정부가 10년간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했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재원이 기존 교부세를 쪼개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빠져 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량 지원은 환영하지만 5조원이 어떤 세목으로 채워질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성 결여도 속제로 남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과 규제 프리존 도입 등 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통합 지역 우선 배려’라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지역이 희망하는 특정 기관이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지원 약속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에 구성된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의 강제성을 높이고 특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지원 “통합시장 출마 생각 없다…국회의장 도전에 올인”

“후배 정치인들에 길 터주고파”
조국 대표도 불출마 ‘가닥’
“향후 여론조사서 제외해달라”



박지원 의원

6월 치러질 초대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하마평에 오른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 시그널을 보내면서 선거 구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링’ 위에 오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통합 시장 자리를 놓고 현역 단체장과 지역 중진 간의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8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단체장 출마설에 대해 “현재로서는 뜻이 없

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역 안팎에서 제를 호출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국회의장 선거라는 더 큰 목표에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올인’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 의원은 ‘선배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초대 통합 단체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열심히 뛰고 있는 유능한 후배 정치인들이 맡는 것이 순리”라며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 원로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측도 입장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최근 조국혁신당 측은 각 언론사에 “향후 통합 단체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 대표의 이름을 후보군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당 대표로서 중앙 정치와 당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도와 팬덤을 보유한 두 유력 주자가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통합 시장 선거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현역 빅매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 사·도지사 출마예상 후보들간 단일화, 합동연행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 부처에서도 행정통합 지원 체계 가동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공식 발표와 맞물려 정부 부처에서도 곧바로 본격 통합 지원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남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통합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의 세부 추진 일정과 협조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고 행정부시장과 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행안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현재 ‘7.5대 2.5’인 국제·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은 재정정책연구원 원장·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국조실 국정운영실장·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교육부 학교정책실장·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등 5명이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원위원회도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광록·김민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